

강원도의 인구이동 유형과 특성

정 성 호*

본 연구는 강원도의 인구이동 유형과 특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강원도 인구분포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강원도 18개 시군 중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시군에서 모두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의 경우 도청소재지와 영서북부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경춘전철 및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서울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경우 춘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는 교통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된다는 점과 최근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선정되면서 발전가능성이 높게 인식되면서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에 반해 강릉은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강원도의 인구이동 유형을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으며, 이를 다시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0~2003년 사이에는 중간거점도시가 춘천, 속초, 동해, 강릉 등 5곳이었으나, 2004~2007년 사이에는 원주, 춘천 등 2곳만이 중간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와 동해는 서울, 경기도로 주로 옮겨가는 특성을 보였으며, 강릉은 서울, 경기와 춘천 및 원주로 동시에 유출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분석결과를 조사기간 중 전반기에는 중간거점도시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많았으나 후반기에 들어서 거점도시인 춘천, 원주로 옮겨간 인구수가 거점도시에서 수도권으로 간 인구수보다 더 많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중간거점도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I. 머리말

1925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강원도 인구는 132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6.8%를 차지했다. 해방 직전인 1944년 185만 명까지 늘었던 강원도의 인구는 남북분단과 동시에 1955년 149만 명으로 약 36만 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북분단으로 인해 강원도의 일부 군(통천, 평강, 김화, 이천, 회양, 고성, 철원 및 양구와 인제군 일부)이 북측 지역으로 편입된 것을 감안할 경우 인구감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E-mail: shc@kangwon.ac.kr

소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강원도 인구는 1970년 186만 5천 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5년 152만 1천 명으로 1960년 인구의 92.9%, 전국 인구비중으로는 3.2%에 불과하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만 6,873.64km²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반면 인구규모는 열한번째로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¹⁾ 이와 같은 인구규모의 변화 양상은 같은 기간 전국의 인구가 89.1%나 증가한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 강원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강원도로 전입한 인구보다 강원도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해 빠져나간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원도의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산업구조 및 공간구조적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간적 인구분포는 고도경제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1960~80년대에 급격하게 도시화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 시기에 농어업 등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던 강원도가 그 인구를 산업도시에 빼앗기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나마 산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석탄, 시멘트 등 광공업은 강원도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보루였다. 그러나 광공업마저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양산업으로 몰리면서 탄광 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은 가속화되었다. 예컨대 석탄산업합리화 조치가 막바지에 이른 1989년과 1990년 사이에만 약 10만 9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탄광 지역에서의 인구감소 추세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199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개방농정의 바람으로 농업인 수의 감소도 강원도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970년 868천 명에 이르렀던 농가인구는 1980년 222천 명이 감소한 646천 명으로 25.6%가 감소하였다. 이후 1990년에는 393천 명으로 10년 동안 253천 명이 감소하였다. 농가인구는 1990년대 개방농정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 농가인구는 238천 명으로 1990년에 비해 154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2004년 말 216천 명에 이르렀다.²⁾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같은 개방농정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으로 강원도의 농가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통계청이 추정한 장래인구 추계도 강원도 인구는 2010년 140만, 2020년 135만, 2030년에는 125만 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³⁾

1) 인구밀도의 경우 강원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94명/km²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의 인구밀도 478명, 서울의 17,045명에 비하면 크게 낮은 밀도임을 알 수 있다.

2) 농가 수의 경우 1970년 149천 가구에 이르렀으나 1980년 124천 가구로 10년 만에 25천 가구가 감소하였다. 이후 농가 수의 감소는 계속되어 1990년 100천 가구에서 2000년에는 77천 가구, 그리고 2004년에는 75천 가구로 감소하였다.

3) 물론 낙관적인 장기인구추계도 있어 2010년 150만, 2020년 147만을 예상하는 연구도 있으나(김태

이렇듯 강원도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얼마나 떠나가는지, 이동의 유형이나 특성은 무엇인지,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글은 강원도의 인구가 어느 경로를 통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2000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의 매년 전출입 인구이동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의 시도와 도내 18개 시군 통계에서 순유출(전출인구에서 전입인구를 뺀 것) 및 순유입(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것) 인구를 계산하고 7년 7개월치를 다시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유출(유입)인구를 산출했다.

도내 인구이동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영서북부권(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영서남부권(원주,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영동권(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통계청 자료와 함께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의 출향인사 200명과 원주시로 이동한 강원도민 100명 등 300명을 대상으로 이동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이와 함께 도내 자치단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자료도 이용되었다.⁴⁾

II. 인구분포와 인구이동 추이

강원도의 인구변동에서 최근 10년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춘천, 원주, 강릉 3대 도시권으로의 인구집중 추세와 군 지역의 인구과소화 진전이다. 군 지역의 인구는 계속 줄어 2005년 센서스 기준 현재 67,000명인 홍천군을 제외하고는 정선, 철원이 4만 명대를, 횡성, 영월, 평창, 인제가 3만 명대를, 화천, 고성, 양양이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구군의 인구는 2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한편 춘천, 원주, 강릉 3대 도시권의 인구집중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 인구에서 3개 도시권의 인구비중은 1970년 34%에서 계속 높아져 1990년 42%, 2005년에는 52%에 이르고 있다.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함께 도시생활권을 이루어 살게 되는 현대 공간체계에서 몇몇 중심도시의 규모가 큰 것은 자연

현·정환영, 1999), 최근까지도 강원도의 인구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어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가 되고 있다.

4) 이 자료는 강원일보 탐사보도팀이 수집한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청 자료, 설문조사, 심층면접 자료 등을 포함한다. 설문조사는 제경도민회 명부를 토대로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00명을 출신지 별로 안배했고,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원주시에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지역 출신들의 향우회 명단을 통해 100명이 선정되었다.

스러운 일이다. 중심거점이 될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100만 명이 안 되는 현실에서는 이들 거점도시의 규모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문제는 함께 도시권을 이루어야 할 군 지역의 인구가 너무나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⁵⁾

1. 인구분포의 변화

1944년 센서스에 따르면 강원도는 21개 군에 10읍 125면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가장 큰 군은 시멘트 산업이 발달한 인구 14만 명의 삼척군이였다. 다음으로 강릉군(12만 8천 명), 춘천군(11만 5천 명), 철원군(11만 명), 김화군(10만 8천 명) 등의 순이었다. 당시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경지대가 비교적 큰 군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이러한 지역별 인구분포는 크게 변했다. 우선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이 쇠퇴하였으며,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및 지하자원을 보유한 태백권 일대의 부상, 그리고 기존 도시와 항만 지역의 도시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35년 당시 도내 읍급 이상의 도시화율은 3.3%였으며, 1944년에는 10%로 상승하였다.

1970년대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 강원도의 도시화율도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1970년 40.6%에 이르렀던 도시화율은 1980년 61.4%, 1990년 71.4%, 2000년 77.8%, 2005년 76.3%에 이르렀다. 1970년 강원도 시·군

<표 1> 강원도내 인구분포의 변화(1970-2005)

	1970	1980	1990	2000	2005	
총 인구(명)	1,865,426	1,790,226	1,579,859	1,484,536	1,521,099	
비중(%)	시부	20.5	32.3	49.6	-	-
	읍부	20.1	29.1	21.8	18.9	18.9
	면부	59.4	38.6	28.7	22.2	23.7
	동부	-	-	-	58.9	57.4

주: 외국인 제외, 도시화율= $(\text{시부} + \text{동부} + \text{읍부}) / \text{전체인구} \times 100$.

1995년부터는 도농복합시(춘천, 원주, 강릉, 삼척)로 인하여 '시부'라는 항목 대신에 '동부'라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해당연도.

5) 중심도시에서 이러한 군 지역 인구를 흡수할 수 있다면 강원도의 인구감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3대 도시권만으로는 도내 군 지역 인구감소를 흡수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 전체 인구 및 강릉권 인구의 감소추세가 그 사실을 말해준다(염돈민, 2007).

별 인구분포의 특징으로는 주로 광공업 및 농업 지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삼척군(27만 7천 명)이 가장 큰 행정구역이었으며, 다음으로 명주군, 홍천군, 영월군, 춘천시, 정선군, 원주시의 순서였다. 1980년의 경우 도시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시가 모두 인구 10만을 넘었으며, 군 지역에서는 삼척, 정선, 홍천 등이 인구 10만을 넘었다. 1990년에 이르게 되면 도시성장세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삼척시가 독립됨으로써 인구 10만 명 이상의 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기존의 도시는 성장세가 뚜렷이 나타나 춘천(17만), 원주(16만), 강릉(15만) 등 3개 도시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로 등장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태백권 폐광지역의 쇠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등 4개 탄광지역 시군의 인구는 1990년대에 들어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강원도 도시 지역의 인구분포에서 주목할 만 것으로 1995년 시행된 도농복합시의 탄생을 들 수 있다. 도농복합시의 형성으로 춘천, 원주, 강릉시가 지역 중심도시로 더욱 부상하게 되었다. 영동지역에서는 강릉, 영서 이북은 춘천, 영서 이남은 원주 등이 강원도의 핵심도시로 등장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원주시의 인구성장이 춘천과 강릉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원주시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의 인구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홍천군(7만 1천 명)을 제외하고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군 지역은 없는 상황이다.

2005년 말 현재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4개의 도농통합시를 포함하여 7개 시, 11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내 시군별 인구변동 추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시와 농산촌간의 인구규모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지난 35년간(1970-2005) 도농통합을 단행한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 모두에서 인구감소가 일어났다. 2005년 현재 시 중에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등은 10만 명 이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태백시는 인구 5만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는 군 지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구감소 비중이 가장 낮은 철원군(18.3%)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군 지역은 40% 이상의 인구감소를 경험했다. 특히 영월군의 경우 1970년 124천 명에서 2005년에는 41천 명으로 무려 66.9%가 감소했으며, 정선군이 그 다음으로 61.1%의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표 2> 강원도 시·군별 인구변화(1970-2005)

단위: 천명, %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인구증감율
춘천시	210	211	218	252	256	21.9
원주시	202	198	214	271	290	43.6
강릉시	230	203	229	234	225	-2.2
동해시	-	104	89	104	99	-4.8
태백시	-	-	90	57	52	-53.3
속초시	73	66	74	90	87	19.2
삼척시	277	251	110	82	73	-73.6
홍천군	124	101	78	74	71	-41.1
횡성군	94	71	48	46	43	-54.3
영월군	124	95	65	48	41	-66.9
양양군	47	42	36	30	29	-38.3
고성군	64	49	41	35	32	-50.0
화천군	51	39	29	25	23	-54.9
철원군	60	64	53	53	49	-18.3
평창군	97	79	53	47	45	-53.6
정선군	113	134	88	50	44	-61.1
인제군	62	48	37	33	32	-48.4
양구군	39	34	28	23	21	-46.2

주: 인구증감율은 1970-2005 사이의 변화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연도.

1990년대 이전의 군 지역의 인구감소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우루과이라운드(UR)와 WTO 체제 후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와 각종 보조금의 감축 및 폐지 등으로 농촌의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산촌지역은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탄광지역의 폐광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태백시와 삼척시, 그리고 영월군과 정선군의 인구감소 추이는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감소 추이는 계속되고 있다.⁶⁾

6) 2008년 4월 말 기준 5만 1,589명을 유지하고 있는 태백시는 상반기 중 한보탄광이 폐광될 경우 인구 5만 선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인구이동 추이

강원도의 총인구 이동자 수는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 11천 명의 전출 초과를 보이던 강원도는 2002년 전출초과가 18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전출초과 폭이 13천 명으로 약간 감소했으며, 2005년 말 현재 11천 명의 전출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출초과는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향한 이동에서 나타났다. 예컨대 2005년 도내에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62,982명인데 반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수는 52,860명으로 10,122명의 전출초과를 보였다. 2005년 수도권 전입자의 전출지 추이에서도 강원도는 전체 수도권 전입자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⁷⁾

<표 3>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도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전출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총전출자의 수는 1970년 83,000명에서 1975년 174,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전출자의 수는 1980년 131,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수준은 1980년대에 계속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5년 전출자의 수는 88,000명으로 줄었으며, 2005년 말 현재 92,000명으로 약간 증가했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전국적인 현상이듯이 강원도에서 타지역으

<표 3> 시도간 이동자의 전출지 분포

단위: 명, %

연도	총전출자	전출지 분포				
		1위	2위	3위	4위	5위
1970	83,696	서울(41.3)	경기(19.6)	경북(13.0)	충북(9.5)	부산(5.2)
1975	174,141	서울(42.5)	경기(19.7)	경북(10.8)	충북(8.7)	부산(4.9)
1980	131,343	서울(37.9)	경기(22.6)	경북(12.1)	충북(6.9)	부산(6.6)
1985	126,034	서울(38.5)	경기(21.3)	경북(7.6)	충북(6.0)	인천(5.4)
1990	129,402	서울(32.1)	경기(26.9)	인천(7.4)	충북(6.2)	경북(6.2)
1995	88,497	경기(29.7)	서울(29.0)	인천(6.9)	경북(6.3)	충북(6.3)
2000	95,487	경기(32.5)	서울(29.2)	인천(6.2)	충북(5.8)	경북(4.9)
2005	92,085	경기(35.8)	서울(26.8)	인천(5.8)	충북(5.5)	경북(4.7)

주: ()내는 총전출자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이동결과》, 2006, 재구성.

7) 1965~2000년 사이의 시·도간 인구이동 추이에서 일관성 있게 서울 전출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으로 전북, 전남, 강원 등이 꼽히는데, 이는 이 지역 인근에 인구를 흡인할만한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최진호, 2002).

로 이주한 사람들의 전출지도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 총전출자 83,000명 중 서울 및 경기 지역으로 이주한 비율이 60.9%에 이를 정도로 수도권으로의 이주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75년 총전출자의 62.2%가 수도권으로 향했으며,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에도 지속되어 1980년 60.3%, 1985년 59.9%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비율이 높아졌다. 1990년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주한 비율이 66.4%에 달했으며, 2005년 그 비율이 68.4%에 이르렀다. 2005년 전체 수도권 전입자 중 강원도가 11.0%로 충남(13.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서울로의 이동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경기 및 인천 지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1990년 서울로의 이동 비율이 32.1%인데 반해 경기(26.9%)와 인천(7.4%)을 합한 비율이 34.1%에 달했다. 1995년에는 경기 29.7%, 인천 6.9%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38.8%, 2005년 41.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경기 및 인천으로의 인구이동은 증가하고 서울로의 이동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는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서울에서 거주할 때 필요한 교통, 주택 상황이 이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다.

〈표 4〉는 1970년부터 2005년까지 타지역에서 강원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전입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 타지역에서 강원도로 전입해 온 사람들

<표 4> 시도간 이동자의 전입지 분포

단위: 명, %

연도	총전입자	전입지분포				
		1위	2위	3위	4위	5위
1970	47,474	경북(21.7)	서울(20.8)	경기(16.1)	충북(12.1)	경남(8.9)
1975	113,931	서울(24.4)	경북(19.4)	경기(15.2)	충북(10.3)	충남(6.7)
1980	106,833	서울(30.8)	경기(20.2)	경북(15.3)	충북(7.8)	부산(6.6)
1985	97,530	서울(30.7)	경기(19.4)	경북(10.7)	충북(7.2)	경남(6.9)
1990	81,765	서울(32.5)	경기(24.7)	경북(7.3)	충북(5.9)	경남(5.8)
1995	79,147	서울(31.6)	경기(28.5)	인천(6.5)	경북(5.9)	충북(5.5)
2000	84,353	경기(31.4)	서울(27.1)	인천(6.5)	충북(6.2)	경북(5.4)
2005	80,612	경기(33.7)	서울(25.4)	인천(6.4)	충북(5.9)	경북(5.4)

주: ()내는 총전입자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2005인구이동결과》, 2006, 재구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북으로 전체 전입자의 21.7%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서울 20.8%, 경기 16.1%의 순을 보이고 있다. 전입자의 수가 급증한 1975년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전입한 비율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로부터의 이주 비율은 1980년에도 30.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85년과 1990년의 지역별 전입 추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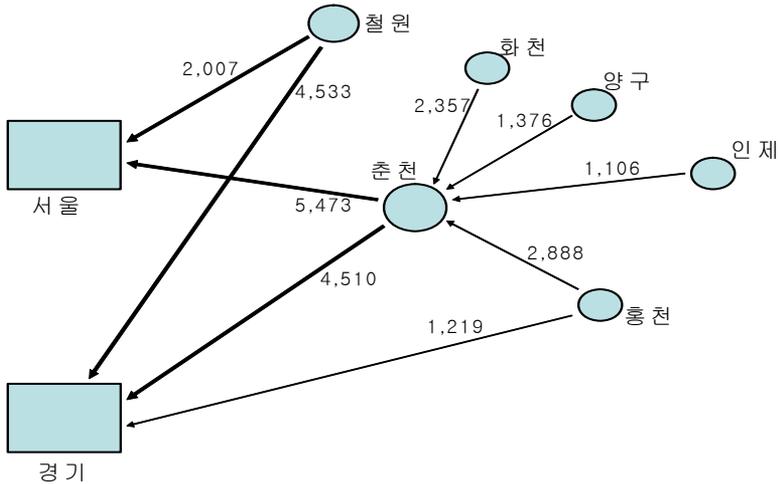
1995년의 지역별 전입 추이는 그 이전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서울로부터의 이주가 31.6%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지만 경기(28.5%)와 인천(6.5%)을 합한 경우 서울을 앞지르게 된다. 앞의 지역별 전출 추이와 마찬가지로 강원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 중 경기 및 인천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2000년, 2005년 자료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즉 서울로부터의 이주는 2000년 27.1%, 2005년 25.4%로 감소한 반면 경기 및 인천지역으로부터의 이주는 2000년 37.9%, 2005년 4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시·군 인구이동 유형

인구이동은 두 지역 사이를 사람들이 전출 또는 전입하는 현상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인구이동은 이주기간이나 장소, 거리, 이동 동기나 의도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예컨대 농촌-도시, 도시간, 도심지-교외지 간의 인구이동 등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 한편 인구이동을 분석하는 경우 그 지역의 주된 인구이동의 방향을 반영하여 인구이동 유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이동 방향은 농촌-도시와 시·도간 이동 및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들 간의 이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경우 시·군·도 등이 인구이동의 공간단위가 된다(최진호, 1994, 김남일·최순, 1998).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몇 단계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된다. 이를 단계이동(step migration)이라고 일컫는다. 예를 들어 농촌→소도시→대도시로의 이동이나 면→읍→그 지역의 시→다른 지역의 시→대도시로의 이동과 같이 몇 단계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로 이동하게 된다. 흔히 단계이동은 도시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소도시→중도시→대도시로 도시체계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을 떠난 이동자들이 항상 단계적으로 소도시를 거쳐서 중도시,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중소소시에 머무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중소도시를 거치지 않고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이희연, 2003).

<그림 1> 영서북부권 인구이동(00년-07년)



영서북부권의 인구이동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철원군을 제외하고 모두 춘천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홍천군과 화천군은 2,000명 이상, 양구군과 인제군은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춘천시로 이동했다. 춘천시는 전국적으로 150,189명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152,240명이 다른 시나 군 등에서 전입하여 2,051명이 순유입되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순유입이 이루어졌다. 특히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등 같은 영서북부권에서 집중적인 인구유입이 진행됐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춘천시로 이동한 사람보다 옮겨간 사람이 많았던 원주시로는 1,201명이 빠져나갔다. 춘천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서울로 5,473명, 경기도로 4,510명이 이동하여 중간거점도시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춘천시는 타시군의 인구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내보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홍천군의 인구 순유출은 춘천시로 향한 것이 가장 많지만 영서북부권에 포함된 다른 군 단위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지역으로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순유출 인구는 5,377명(전출 53,596명-전입 48,219명)으로 이 중 춘천시로의 이동이 53.7%인 2,888명이었다. 원주시로의 순유출도 1,294명에 이르고 있어 영서북부권의 다른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했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원주시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1,219명의 순유출 인구가 경기도로 이동했으며, 서울로의 순유출은 523명

에 이르고 있다.

철원군의 인구이동은 지리적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특성 때문에 도내 시군과의 인구교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중 철원군에서 390명만이 춘천시로 순유출한 반면 경기도로 순유출한 인구는 4,553명(전출 18,925명-전입 14,372명)으로 이 중 1,284명이 인접한 포천시로 이동했다. 서울로도 2,007명(전출 9,102명-전입 7,095명)이 옮겨갔다. 이렇듯 철원군의 인구도 서울과 경기도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사기간 중 부산,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에서 인구가 순유입 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군부대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군인 가족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천군의 인구이동은 춘천시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다. 화천군의 전체 순유출 인구 중 72.8%가 춘천시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로는 5,929명이 전출하고 5,329명이 전입해 와 순유출은 600명에 달했으며, 서울로의 순유출 규모도 85명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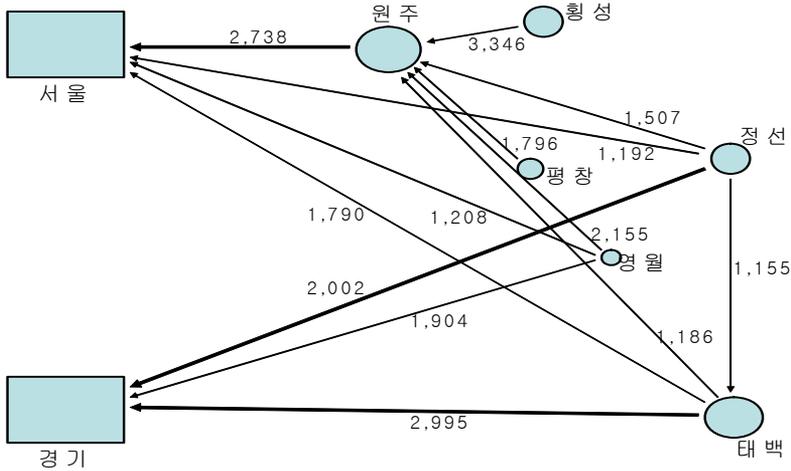
양구군의 순유출 인구는 2,826명(전출 21,979명-전입 19,153명)이었다. 이 중 48.7%인 1,376명이 춘천시로 순유출 되었다.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는 680명이었으며, 서울로 이동한 순유출 규모도 425명에 머무르고 있다.

인제군은 춘천시로 1,106명, 경기도로 913명이 각각 이동했다. 순유출 인구가 춘천시로 집중된 것은 영서북부권의 다른 군 지역과 다르지 않았지만 전출 및 전입 인구수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와의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서남부권의 인구이동은 최근 인구 30만 명을 돌파한 원주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주시의 순유입 인구는 20,953명(전입 193,560명-전출 172,607명)에 이르렀다. 이 기간 강원도를 빠져나간 순유출 인구가 83,334명임을 감안하면 원주시의 인구증가는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원주시는 서울(2,738명)과 경기도(929명), 대전(498명), 충남(265명), 제주도(5명)로만 순유출됐을 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등 전국에서 인구가 유입되었다. 이는 원주시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교통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된다는 점과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선정되면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도내에서는 횡성군에서의 순유입이 3,3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월군(2,155명)이 그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강릉시에서 2,122명, 동해시에서 862명 등 영동권의 주요 도시에서도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원주시는 영서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을 포함하는 도내 전 지역에서 인

<그림 2> 영서남부권 인구이동(00년-07년)



구를 흡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원주시 전체 순유입 인구의 90%가 강원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내 시군 인구만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방패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태백시는 도내에서 영월, 정선 등과 함께 대표적인 폐광지역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순유출 규모도 7,853명(전출 45,476명-전입 37,623명)으로 도내에서 여섯 번째로 많았다. 이 중 서울(1,790명)과 경기도(2,995명), 원주시(1,186명)으로의 이동이 76%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강릉, 춘천 등으로도 분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선에서 1,155명이 순유입되었고 제주도에서도 131명이 태백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외 지역에서 순유입 발생이 거의 없어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횡성군에서 전국으로 이동한 순유출 인구는 3,262명(전출 34,140명-전입 30,878명)이었다. 그러나 원주시로의 순유출이 3,346명이나 된 것은 타 시도와 도내 일부 시군에서 횡성군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은 반면 원주시로의 전출인구가 전입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횡성군은 서울로부터 141명이 순유입(전입 4,667명-전출 4,526명) 되었고, 부산, 인천 등의 지역에서도 전입이 더 많았다.

도내에서도 강릉, 동해, 영월, 평창, 정선, 양구, 고성, 양양 등에서도 순유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로 유출된 인구가 너무 많아 횡성군 전체 인구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자체 읍면동에서의 인구이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횡성군은 원주시로의 전입, 전출이 읍면 간 이동보다도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결국 횡성군은 타 시도 및 도내 일부 시군에서 인구를 받아들이고 원주시로 다시 내보내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폐광지역인 영월군은 순유출이 8,583명(전출 42,537명-전입 33,954명)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다섯 번째에 이르고 있다. 순유출 인구 중 25.1%인 2,155명이 원주시로 이동했으며, 서울과 경기도로 이동한 인수도 각각 1,904명, 1,208명에 이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충북으로 순유출된 인구가 1,745명으로 서울과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보다 많다는 점이다. 이는 영월군과 불과 20~30분 거리에 위치한 제천시로의 이동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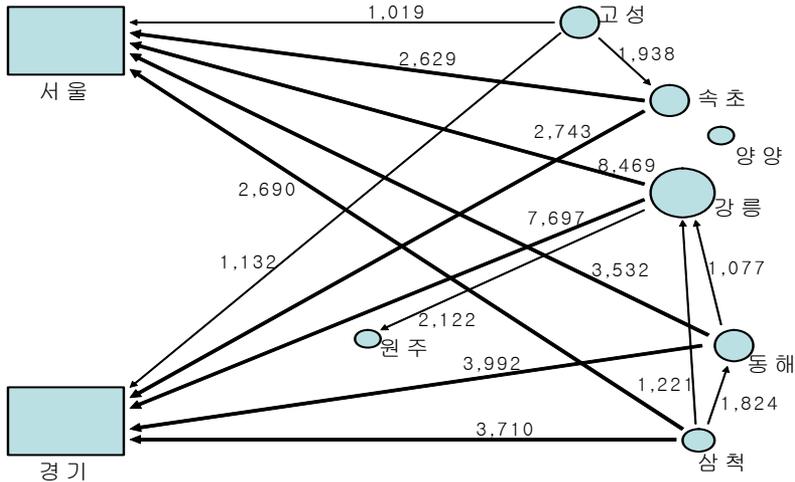
정선군은 영서남부권 지역 중에서 인구유출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다. 총 9,108명(전출 44,328명-전입 35,220명)의 순유출 인구 중에서 원주와 태백시로의 이동이 각각 1,507명, 1,155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 유형은 군 단위 지역 인구가 인근 시지역으로 유출되는 도내 시군 간 인구이동의 특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최종 정착지인 A그룹 지역으로의 인구이동도 뚜렷이 나타나 서울과 경기도로의 순유출 규모가 각각 1,191명과 2,002명에 이르고 있다. 정선군의 인구이동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유독 2002년에만 서울, 경기도, 인천, 춘천, 원주, 강릉 등에서 인구가 유입되었다는 점이다.⁸⁾

평창군은 횡성군과 함께 도내에서 서울과 경기도로 유출되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오히려 90명이 순유입되었고, 경기도로는 321명이 순유출 되었다. 또한 부산, 대구 등 타 시도를 비롯해 동해, 정선, 인제, 철원 등에서 소수이지만 순유입이 발생했다. 이처럼 영서남부권의 시군 중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조사 기간 중 순유출 인구 3,451명(전출 37,078명-전입 33,627명) 중 원주시(1,796명)로 가장 많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영동권에서는 강릉시가 인구이동의 거점도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분류됐으나 춘천시와 원주시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의 경우 동해시와 속초시, 삼척시로부터 순유입이 발생했지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고 삼척시는 동해시로, 고성군과 양양군은 속초시로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8) 이는 당시 강원랜드(현재 하이원리조트) 본 카지노가 2003년 4월 개장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미리 이동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다시 큰 폭으로 인구유출이 발생했으며, 이는 강원랜드 하나만으로 인구유출을 막는다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 영동권 인구이동(00년-07년)



강릉시의 순유출 인구 규모는 15,959명(전출 136,725명-전입 120,766명)으로 도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출된 지역이다. 특히 서울(8,469명)과 경기도(7,697명)로 집중되었으며, 원주시로의 인구 유출 규모도 2,122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강릉시는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등으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 지역들에서 유입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유출이 서울, 경기, 원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강릉시의 인구이동은 영동권 인구를 받아 다시 수도권으로 내보내는 중간기지 역할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사 기간 중 강릉시에서 도내로 이동하는 각 시군별 전출 인구수가 1만 명을 넘지 않는 반면 서울과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는 각각 29,284명, 30,147명인 것으로 나타나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시의 경우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5,635명의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 서울(2,629명)과 경기도(2,743명)로 집중적 순유출이 발생했고,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로도 빠져나갔다. 속초시에서 발생한 순유입은 인근 지역인 고성군과 양양군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이렇게 유입된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서울과 경기도로 빠져나간 셈이다.

동해시는 인접한 삼척시로부터 발생한 1,824명(전입 8,555명-전출 6,731명)의 순유입 인구규모가 가장 컸다. 영동권을 포함한 도내에서는 속초시와 태백시에

서만 약간의 인구유입이 있을 뿐 순유입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순유출은 서울 3,532명, 경기도 3,992명이었고 강릉 1,077명, 원주 862명 등 총 9,885명(전출 76,286명-전입 65,401명)에 달했다. 이러한 순유출 규모는 도내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교류의 경우 영동권에서 강릉시와 삼척시와는 전출입이 6,000~8,000명대, 속초시는 1,000명대로 나타났으나 고성군, 양양군과는 300~500명대에 불과했다. 이렇듯 동해시의 인구이동 형태도 강릉시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도를 향해 중점적으로 움직였고, 영동지역의 시단위 지역과 주로 인적교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시는 조사 기간 중 도내 순유출 인구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다. 삼척시로부터 전국 각지로 순유출된 인구는 총 13,075명(전출 51,763명-전입 38,688명)에 이르렀다. 조사 기간 중 삼척시는 어느 시·도·군과의 인구교류에서도 옮겨간 인구보다 100명 이상 더 많이 받아본 적이 없었다. 순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로 각각 2,609명, 3,710명이 이동했으며, 강릉시와 동해시로도 각각 1,221명, 1,824명이 이동했다. 다만 서울, 경기도, 강릉시, 동해시로 순유출되는 인구가 2003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인근 시 지역으로 인구를 많이 유출하는 것처럼 고성군도 속초시로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했다. 고성군의 순유출 규모는 5,480명으로 이 중 36.2%인 1,938명이 속초로 이동했다. 서울과 경기도로 이동한 순유출 규모도 각각 1,019명, 1,132명에 이르고 있으며, 춘천, 원주, 강릉 등으로도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 횡성군과 마찬가지로 자체 읍면동 내에서의 인구이동보다 속초시로의 전입, 전출 인구가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양양군의 인구이동은 순유출 인구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역으로 쏠림 현상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속초시와 인접해 있어 고성군과 같이 속초시로의 순유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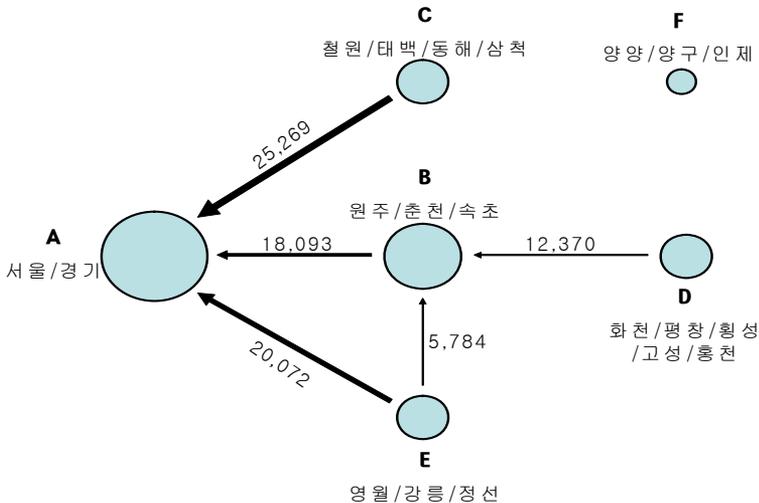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리적 위치에 따른 강원도의 시군별 이동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홍천, 양구, 인제 등 영서북부권에 속한 군 지역의 순유출 인구는 춘천시로 이동한 데 반해 철원군은 경기도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대부분 경기도로 향했음을 볼 수 있다. 이외는 달리 춘천시는 서울과 경기도로 7년여간 1만 여명에 가까운 순유출이 발생했다. 둘째, 영서남부권에 포함된 태백, 횡성, 영월, 평창 등의 인구이동은 원주시로 집중되었다.

이중 정선군은 원주시와 인근의 태백시로 나뉘어 인구가 빠져나갔고 평창군도 원주와 강릉으로 양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인구 30만을 돌파한 원주시는 춘천시와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동권의 경우 강릉시가 일정 부분 거점도시의 역할을 하면서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구군의 인구를 흡입했으나 2004년 이후 수도권과 영서권으로의 유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인구이동의 특성과 함께 본 연구는 강원도의 인구이동 유형을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A그룹은 강원도 인구의 종착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도내 인구는 여전히 서울과 경기도로의 이동이 압도적으로 많아 서울과 경기도는 강원도에서 떠나간 인구의 최종 종착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도내 인구가 전국 각지로 나간 순유출 인구는 83,334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수도권으로 이동한 숫자는 74,741명에 달해 89.6%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B그룹은 도내 인구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서울, 경기도로 유출시키는 중간거

<그림 4> 시·군 인구이동 네트워크 모형(전체기간)



- 주: A) 인구 이동의 최종 종착지
- B) 도내 인구가 흡수되면서 동시에 서울/경기로 유출되는 중간거점도시
- C) 서울/경기로의 직접 순유출이 많은 지역
- D) 도내 중간거점도시로의 순유출이 많은 지역
- E) 최종 종착지인 서울/경기 및 중간거점도시로 동시에 유출되는지역
- F)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

점도시의 특성을 보이는 춘천, 원주, 속초 등을 들 수 있다. C그룹은 도내 시군보다 서울, 경기로의 직접 순유출이 많은 곳으로 동해, 태백, 삼척, 철원 등을 들 수 있다. D그룹은 춘천, 원주, 속초 등 중간거점 지역으로의 순유출이 많은 지역으로 홍천, 횡성, 평창, 화천, 고성 등이 있다. E그룹은 최종 총착지인 서울, 경기 등 A그룹과 원주, 춘천, 속초 등 중간거점인 B그룹으로 동시에 유출되는 지역으로 강릉, 영월, 정선 등 3곳을 들 수 있다. F그룹은 어느 지역으로든 인구이동이 700명 이하로 이동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양구, 인제, 양양 등이 있다. <그림 5>는 시군 인구이동 유형을 전반기(2000년~2003년)와 후반기(2004~2007)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기에는 중간거점도시(B그룹)가 춘천, 속초, 동해, 강릉 등 5곳이었으나 후반기에는 원주, 춘천 등 2곳만이 중간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했다. 속초와 동해는 서울, 경기도로 주로 옮겨가는 C그룹으로, 강릉은 서울·경기와 원주·춘천으로 동시에 유출되는 E그룹으로 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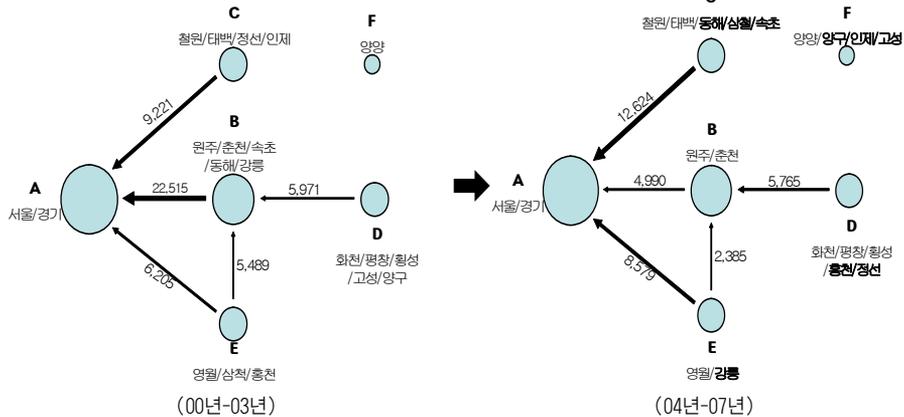
삼척과 홍천은 전반기에 서울·경기와 원주·춘천·속초·동해·강릉 등 거점 도시 양쪽으로 이동하는 E그룹에 속했으나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삼척은 서울·경기지역으로 다수 이동하는 C그룹으로 바뀌었고, 홍천은 원주·춘천 등 거점도시로 주로 이동하는 D그룹으로 변했다.

정선과 인제는 전반기에 서울·경기로 많이 이동하는 C그룹이었으나 후반기에 들어서는 정선의 경우 원주, 춘천, 속초, 동해, 강릉 등 중간거점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많은 D그룹이 되었고, 인제는 인구이동이 거의 없는 F그룹으로 변했다.

고성, 양구 지역 역시 전반기에는 원주, 춘천, 속초, 동해, 강릉 등 중간거점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많은 D그룹에 속했으나 후반기에는 인구이동이 거의 없는 F그룹으로 바뀌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전반기에는 중간거점도시에서 서울·경기로 이동한 인구가 22,515명, 화천·평창·횡성·고성·양구에서 중간거점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5,971명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비율이 거점도시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중간거점도시에서 서울·경기로 이동한 인구는 4,990명, 화천·평창·횡성·홍천·정선 등에서 중간거점도시로 이동한 인구는 5,765명으로, 도내에서 거점도시인 춘천, 원주로 옮겨간 인구수가 거점도시에서 수도권으로 간 인구수보다 더 많았다. 결국 원주, 춘천 등 중간 거점도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시·군 인구가동 네트워크의 변화



4. 인구가동의 원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강원도의 인구는 춘천과 원주 등 도시인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농산촌은 인구과소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년에 약 7,500 명 정도의 꾸준한 전출초과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전출초과 현상을 막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즉 일자리 부족,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이 미흡하다는 점이 인구를 유출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며, 따라서 직장여건의 향상,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의 개선 등은 인구를 유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구감소 추이가 계속되자 도내 각 시군은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 일자리 창출, 주소이전 및 전입세대 지원 등 인구유입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문화·주거·복지 등 생활환경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설문조사에서도 인구유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이주민들의 견해는 기존의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출향인들 중 고향을 떠난 지 31년 이상 된 경우가 143 명으로 가장 많았고, 21~30년 사이 75명, 11~20년 사이 64명, 6~10년 14명, 1~5명 4명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144명, 경기

도 56명, 원주시 100명 등이다. 또한 연령별로는 50대 104명, 60대 96명, 40대 81명, 30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향인들은 고향을 떠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취업 때문'(36.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 교육 등 학업 때문'이라는 응답도 31.7%에 이르렀다. '직장의 이동 때문'이라는 응답도 21.3%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은 4.3%로 비교적 적게 나타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수도권이나 원주에 거주하는 응답자를 별도로 분리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도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인들 중 38.5%가 '본인의 교육 때문'이라고 밝혀 직장 문제(31.5%)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진학 등 학업을 위해 서울 등으로 떠났다가 지금까지 계속 수도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상과는 달리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낮았던 것은 이번 조사 응답자의 81%가 10대나 20대 때 집을 떠나왔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⁹⁾

강원도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 등을 통한 고용인원 창출'이라는 응답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기반 확충'(18.7%), '정주여건 개선'(1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났던 출향인들은 '일자리 창출'이 지역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적으로 지역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SOC 확충'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평가(4.3%)했다.

현재 도내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증가 사업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6.7%가 '기업유치 등 직장여건 개선'을 꼽고 있다. 이에 비해 '중·고등학교 등 교육여건 개선'은 14%, '복지 강화 등 주거여건 개선'은 11%에 머무르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자주 등장하는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한 주소지 이전운동'과 '신생아 출산시 지원 등 출산장려'는 각각 4.3%, 2.7%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출향인들은 주소지 이전이나 출산장려 등과 같이 단편적이고 한시적인 사업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펴야 인구 유출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9) 지역을 떠난 시점에 대한 응답에서 20대에 떠났다는 응답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20대가 취업을 가장 많이 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이동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 10대 때 이동했다는 비율이 26%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진학 등 학업 문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비해 30대와 40대에 이동한 비율은 각각 15%, 3.3%를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향을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59.7%로 ‘있다’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에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입장이 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반면 30대 89.5%, 60대 이상 70.8%는 가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귀환이동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강원도 인구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현재 일선 시군에서 내놓은 각종 정책을 모두 실현하면 과연 강원도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누구도 “그렇다”고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은 이유도 그만큼 강원도의 인구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 동안 각 시군마다 수많은 정책을 펼쳤음에도 인구감소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들이 잘못 됐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해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주목할 만 하다.

일부에서는 이제 농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국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지역별 거점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현실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제는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줄이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는 바로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소규모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구 유출을 줄이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그 지역 내부에 있다고 본다. 즉 강원도와 같이 교통이 열악하고 시장성이 좁은 지역에 기업들이 유치되기 쉽지 않고,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군에 뿌리내리고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끌어들이려 하기보다는 내부의 성장 동력을 찾아보자는 시도이다. 지역 재부적인 물적·인적 자원의 동원과 외부적인 정치, 제도, 자본 등의 자원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신내생적 발전 방안’이 인구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¹⁰⁾

10) 이 주장은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해 지역진흥을 꾀하는 이른바 외생적 전략은 선진국의 경우 초기에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고 소득의 외부 유출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본다.

Ⅲ. 맺음말

강원도는 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농산어촌 지역은 대도시로의 인구유출로 인구감소를 경험하였다. 2005년 현재 남한 전체 인구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150만 명 정도의 인구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¹¹⁾ 인구감소는 강원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동력을 끊고 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공동화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더딘 산업발달과 각종 규제, 불편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폐광에 따른 탄광지역 경제의 붕괴 등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구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부족 등은 또 다른 인구감소 원인으로 작용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도내 인구 중 상당수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는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간 불균형 및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당장 인구가 줄면서 도내 시·군마다 지방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5년 도내 각 시·군의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면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개에 이른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도 감소되고 선거구 조정으로 국회의원 수도 줄어들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세 약화의 손해도 볼 수 있다. 인구수는 지방교부세 등 각종 사회지표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도세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산촌 인구의 과소화도 중요한 인구문제이다. 도내 시군별 인구변동 추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시와 농산촌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춘천, 원주 등 일부 도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대부분의 군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 지방화의 진전이 두드러졌던 90년대에 와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선정된 원주시와 이에 근접한 군지역의 인구변동 상황은 도시와 농산촌의 상황

11) 통계청의 장래인구 전망도 강원도 인구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은 2010년에 강원도의 인구는 144만 1,000여 명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139만 8,000여 명으로 줄어 150만 명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라면 통계청의 예측이 훨씬 빨리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원주시의 인구는 급증하여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인구 30만 명을 돌파한 반면 평창군, 영월군의 인구는 더욱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경춘고속도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경춘선 복선 전철 건설 등 강원도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 강원도로의 인구유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전망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서울 및 수도권의 중산층이 쾌적한 환경의 강원도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유출된 30~50대 중장년층의 경우도 전원생활 등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그리고 도로망 확충과 지역개발에 따른 기대심리에서 강원도를 찾을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휴양과 보양을 원하는 노인계층이 강원지역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강원도가 적절한 정주기반을 조성하면 수도권 중산층, 지역연고 중장년계층, 노인계층 등의 상당수가 강원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수도권 중산층의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쾌적한 주거지역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주거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이 양호하고 적절한 편의시설과 함께 휴양과 보양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강원도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도시나 주거단지의 조성을 통해 이러한 중산층의 유입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의 유입도 예상할 수 있다. 강원도는 노인계층의 생활에 적합한 양호한 자연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계층의 유입을 위한 단지조성이나 전원신도시 건설을 통해 실버기능의 유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원도 (2005) 《강원통계연보》.
- 김남일·최순 (1998) “인구이동과 지역단위별 농촌인구분포의 변화” 《한국인구학》 21(1): 42-79.
- 김태현·정환영 (1999) “시도별 장래인구추계(1995-2020)” 《한국인구학》 22(1): 75-215.
- 염돈민 (2007) “강원도 인구구조의 특징과 전망” 《전환기의 강원사회》 강원사회연구회(편).
- 이희연 (2003) 《인구지리학》 범문사.

- 최진호 (1994) “한국의인구이동 패턴 변화와 수도권인구이동” 《한국인구학》 17(2): 1-20.
- _____ (2002) “인구분포와 국내 인구이동” 《한국의 인구(2)》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 통계청 (2005) 《장래인구추계》.
- _____ (2006) 《2005 인구이동결과》.
- _____ 《인구주택 총조사》 해당 연도.
- _____ 《인구이동 결과》 해당 연도.

[2008. 4. 15 접수 | 2008. 7. 20 채택]

The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Movement in Kangwon Province

Sungho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movement in Kangwon province.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drawn from in- out- migration data establish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KNSO) between 2000 and 2007. Sample survey and depth interview were also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pulation of all Si and Gun except Choonchun and Wonju declined. This decline of population in Kangwon province persisted during the last decades. The decline started with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1960s and 1980s. The decline of population in Kangwon province continued in the 1990s and 2000s with the open agriculture policy rooted in UR and FTA.

All Si and Gun can b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in terms of population movement in Kangwon province between 2000 and 2007. The first group(Group B) is where in-migration from other Si and Gun and out-migration to Seoul and Kyunggi continues in the period. Choonchun, Wonju, and Sokcho belong to this category. The second group(Group C) is where out-migrarion to Seoul and Kyunggi is larger the in-migration. It includes Cholwon, Taebaek, Donghae, and Samchok. The third group(Group D) is where out-migration to Group B is larger than that of other places. Hwachun, Pyungchang, Hoegsung, Gosung, and Hongchun are included in this group. The fourth group(Group E) is where out-migration to both Group B and Seoul & Kyunggi is large. Youngwol, Gangnung, and Chungsun belong to this category. The fifth group(Group F) is where few population movement occurs. It includes Yangyang, Yanggu, and Injae. The findings also shows that the extent of population movement to Choonchun and Wonju is larger than that of Seoul and Kyunggi in recent period.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effect of base city like Choonchun and Wonju has become in recent years.

Key Words: population distribution, migration, pattern of base city